

# 나라살림 On Track 인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Public Sector Leader  
윤영원 부대표



# 나라살림 On Track 인가?

100조, 200조, 300조,  
2017년에는 400조?  
늘어나는 나라 살림  
규모에 맞춰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정부예산편성  
내용과 재정운영계획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 들어가며

우리나라 살림 규모는 2001년 100조 (김대중 정부), 2005년 200조(노무현 정부), 2011년 300조 (이명박 정부), 2017년 400조 (박근혜 정부)로 16년 만에 4배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2017년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 원으로 2001년의 국가채무와 비교해서 5.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기간 동안 정부예산의 증가보다 국가채무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을 저하,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일 수는 없는 것인가? 2017년 정부예산 편성내용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나라살림 On Track인가?

정부는 2017년에 실질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하여,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총수입을 414조 5,000억 원으로 추계했으며,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01년 이후 진보정부, 보수정부 구분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예산 규모가 'On Track'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수입과 지출, 국가채무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수입예산인 총수입에 대한 추정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총수입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총수입은 2014년 대비 15.4조원(4.3%) 증가하여 2014년의 1.3%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경상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추경예산대비로는 5.8조원(-1.6%)의 결손을 시현하여,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원 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총수입(추경예산포함)이 4년 연속으로 부족징수 되었다는 것은 총수입추정을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해왔다는 반증일 수 있다.

세금이 잘 걷힐 것으로 보고 세출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족세원으로 인하여 국가채무의 증가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세입추정에 대해 너무 비관적 또는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결손 추정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세출의 분야별 자원배분을 들여다 보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의 확장적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 구분             | '16년(A)      | '17안(B)      | 증감<br>(B-A) |            |
|----------------|--------------|--------------|-------------|------------|
|                |              |              |             | (%)        |
| <b>총지출</b>     | <b>386.4</b> | <b>400.7</b> | <b>14.3</b> | <b>3.7</b> |
| 1. 보건·복지·노동    | 123.4        | 130.0        | 6.6         | 5.3        |
| ※ 일자리          | 15.8         | 17.5         | 1.7         | 10.7       |
| 2. 교육          | 53.2         | 56.4         | 3.3         | 6.1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1.2         | 45.9         | 4.7         | 11.4       |
| 3. 문화·체육·관광    | 6.6          | 7.1          | 0.5         | 6.9        |
| 4. 환경          | 6.9          | 6.9          | -           | 0.1        |
| 5. R&D         | 19.1         | 19.4         | 0.3         | 1.8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6.3         | 15.9         | △0.3        | △2.0       |
| 7. SOC         | 23.7         | 21.8         | △1.9        | △8.2       |
| 8. 농림·수산·식품    | 19.4         | 19.5         | 0.1         | 0.6        |
| 9. 국방          | 38.8         | 40.3         | 1.5         | 4.0        |
| 10. 외교·통일      | 4.7          | 4.6          | △0.1        | △1.5       |
| 11. 공공질서·안전    | 17.5         | 18.0         | 0.5         | 3.1        |
| 12. 일반·지방행정    | 59.5         | 63.9         | 4.4         | 7.4        |
| ※ 지방교부세        | 36.1         | 40.6         | 4.5         | 12.5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에서의 지출증가가 5% 이상의 상대적으로 지출이 높은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국방분야가 4% 증가,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3% 증가 되는 것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반면에 환경, R&D, 농림·수산·식품분야는 큰 변동이 없으며,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지출감소분야로 편성되었다.

130조원대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그리고 교육, 국방 및 일반·지방행정분야의 지출예산이 총지출의 70%이상인 동 분야들은 하방경직의 특성을 가진 고정성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탄력성이 낮아 지출예산을 줄이기 힘든 분야로서 집행의 투명성, 효과성 및 형평성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매년 균형수지의  
 달성이 지연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하여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는 "2015 회계연도 총지출 결산액은 372.0조 원으로, 추경예산 384.7조 원 대비 12.7조 원 적었으며, 당초 본예산 375.4조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 3대 중점 투자과제로서 ① 경제 살리기, ② 안전 만들기, ③ 희망 나누기를 제시하고 과제별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고 또한,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메르스 대응, 가뭄 및 장마대책, 서민생활안정·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정책사업 분석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예산편성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로 "①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② 우리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③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④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안정, ⑤ 국방·치안·안전 강화로 국민안심사회의 구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중점투자사업의 집행에서 투명성,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며, 성과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적절히 환류(feed-back)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 관리재정수지<br>(GDP대비, %) | △39.1<br>(△2.4) | △28.1<br>(△1.7) | △25.0<br>(△1.4) | △23.2<br>(△1.2) | △20.4<br>(△1.0) |
| ■ 국가채무<br>(GDP대비, %)   | 637.8<br>(39.3) | 682.7<br>(40.4) | 722.5<br>(40.9) | 756.8<br>(40.7) | 793.5<br>(40.7) |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적자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1.0)%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는 40.7%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는 2018년에 (△1.0)%의 관리재정수지를 유지하고 36.3%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불과2년 만에 관리재정수지(△1.0)% 달성이 2년간 지연되고 국가채무비율이 40%이상으로 운영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물론 정책방향과 여러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이 변경되어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균형수지의 달성이 매년 지연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만 하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총량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